

두원공조, 하청 도면 무단유출 “명시적 동의 없는 제공은 위법”

공정위, 3.9억 과징금·시정명령
중국·인도 계열사에 부당 제공
경쟁사에 도면 전달해 수정 의뢰
비밀유지 없이 도면 요구도 적발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인도 해외법인과 경쟁업체에 무단으로 넘긴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 9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8일 두원공조가 하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을 수급사업자와 명시적 합의 없이 해외 계열사 5건(중국 3건, 인도 2건)과 경쟁 하청업체 1건에 부당하게 제공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두원공조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두원공조는 해외 법인이 사용하는 금형의 수리에 미리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와 별도 합의 없이 금형도면을 중국 법인 강소두천과 인도 법인 두원인디아에 제공했다. 또한 대금 정산 갈등으로 금형 수리를 거부한 A 하청업체의 동의 없이 해당 업체의 금형도면을 경쟁업체인 B 하청업체에 송부해 금형을 수정하게 했다.

두원공조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피치 못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정이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원공조는 “영세한 국내 금형제작업체는 현실적으로 해외출장이 어려워 금형도면을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생산 일정 차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업체에 긴급 수정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매일 제목에 ‘해외 전달용’ 등을 단순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명시적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실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미리 금형도면을 해외 계열사에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한 두원공조가 2017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7개 하청업체에 금형도면 99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5

개 하청업체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했다.

이번 조치는 금형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부당성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원사업자가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서면을 통한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통행위와 기술자료 요구 관련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고용·산재보험 과납금, 앱 환급서비스 도입

근로복지공단, 네이버페이로 가능

근로복지공단이 9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민간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된 ‘과납금 환급원스톱서비스’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정부24에서만 과납금 조회가 가능했고, 환급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주로 사

업주의 착오 납부나 근로자의 입·퇴사로 인한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과납금이 사업주들에게 환급되고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가 3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다는 것이다.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어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친숙한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환급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축산물 이력·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농식품부 등 4개 기관 합동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을 부적절한 경로로 유통하는 업체에 대해 이달 하순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9~27일 3주간 예정된 단속에는 농식품부 외에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4개 기관이 함께 나선다.

농식품부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 ▲원산지 표시 등의 관련 서류를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에

서 시료를 채취하고 도축장에서 미리 채취해 둔 시료와 유전자(DNA) 동일성 분석을 통해 위반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코트라-해협, K-푸드 수출 협력 강화

KFS 인증 기반 마케팅 지원 확대
식품수출 경쟁력·인지도 동시 제고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협인증원)이 국내 식품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K-푸드 확산을 위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코트라와 해협인증원은 지난 5일 충북 청주 해협인증원 본원에서 국내 식품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K-푸드 확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협인증원은 한국산 안전 식품임을 국가가 공식 보증하는 ‘KFS(Korea Food Safety) 인증’ 발급을 확대하고, 코트라는 인증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한국산 고품질 식품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수출 확대를 도모한다.

특히 최근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로 중국(30~145%), 인도(27%), 베트남(46%), 인도네시아(32%)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산 관세율(25%)임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양 기관의 협업은 K-푸드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트라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5일 충북 청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에서 국내 식품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K-푸드 확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명희 KOTRA 부사장 겸 혁신성장본부장(오른쪽 다섯 번째), 한상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원장(오른쪽 여섯 번째)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코트라

주요 협력 내용은 ▲KFS 인증취득 및 수출·판로개척 협력 ▲현지 유통사 연계·발굴 및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수출지원 사업 공동 추진 ▲K-푸드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우수 사례 벤치마킹 및 상호 홍보 활동 강화 등이다.

K-컬처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K-푸드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K-푸드 수출은 최근 9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며 매년 최고실적을 경신해왔다.

2024년 K-푸드 수출액은 106.6억 달러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으며, 라면(12.5억 달러)이 수출을 견

인했다. 과자류(7.7억 달러), 음료(6.6억 달러), 소스류(3.9억 달러), 커피조제품(3.4억 달러) 등 가공식품과 더불어 K-농업 직결 품목인 김치(1.6억 달러) 수출도 늘어 성장세에 기여했다.

김명희 코트라 부사장 겸 혁신성장본부장은 “현재 K-푸드는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힘입어 글로벌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K-푸드 수출 확대는 물론, 농업이 미래농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해양 협력’ 외교전 펼친다

‘제3차 UN해양총회’ 참석

해양수산부가 이달 9~13일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는 ‘제3차 UN해양총회’에 참석한다고 8일 밝혔다.

UN해양총회는 UN의 17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중 14번 목표(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및 해양자원 보전)를 위해 UN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 NGO 등이 모두 모이는 해양 분야 최대·최고위급 회의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공동으로 오는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UN 해양총회는 3년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선진국이 본회의를, 개도국이 이에 1년 앞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2022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2차 회의(포르투갈·케냐가 공동개최)에서는 UN사무총장과 24개 UN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바 있다.

제3차 UN해양총회는 ‘해양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행동의 가속화 및 모든 행위자의 추동’을 주제로 개최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전기차 폐배터리 기술자료집 발간

환경과학원, 국내외 정책·표준 동향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기술 자료집’을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9일 공개되는 이 자료집에는 국내외 배터리 관리 정책, 산업 및 기술 현황, 폐배터리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 등을 두루 담았다. 특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수거·보관·운송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배터리 주요 생산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각국의 배터리 규제 및 시장동향도 수록돼 있다. 또 2차전지 산업구조, 블랙매스 수·출입 현황 및 핵심소재 공급망 정보도 포함됐다.

이 자료집은 공공부문의 정책 및 국제표준(ISO) 제정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계 현장의 실무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환경과학원은 예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폐배터리와 관련된 국제표준(ISO)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세종=김연세 기자